광주역 일대 문화산업 거점·전남대 주변 상권 활성화 추진

광주 5곳·전남 8곳 선정…도시재생 뉴딜 어떤 사업 펼치나

서구 농성동 일대 공동체 마을
동명·사직동 골목상권 활성화
나주 금남동 역사·문화 복원

정부는 지난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남구 양림동 등 3곳, 전남도는 목포 만호동 일원 등 5곳이 선정됐으나 올해는 5곳, 8곳으로 각각 선정 대상이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99곳이 선정됐으며, 이 중 파급효과가 큰 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 20곳이다. 국비, 지방비,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기금활용 등 총사업비는 7조 9111억원 규모이며, 국비는 9738억원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각 700억원과 80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내년 상반기 사업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착수, 그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역, 전남대 주변 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 선정=광주역 일원의 '광주 역전(逆轉), 창의문화산업 스타트업 밸리' 조성사업이 경제기반형 뉴딜사업으로는 전국에서 포항과 함께 단 2곳에 포함돼 국비 25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경제기반형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광주역전, 창의문화산업 스타트업 밸리'는 도심기능 쇠퇴가 심각한 광주역 일대를 미래형 문화콘텐츠산업을 이끄는 원도심 문화경제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고속철도 진입 중단, 공공기관 이전으로 쇠퇴한 광주역 주변을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창의 문화산업 경제거점으로 조성하고 유휴 부지를 활용해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중심시가지형(대학 타운형)으로 선정된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는 전남대와 북구청이 지역공헌센터를 설립해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대 주변에 400억원을 투입하며 대학자산 지역 환원을 위해 지역공헌센터 건립, 도시재생 플랫폼, 창업지원주택 등이,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공유상점 리모델링, 테마거리 활성화, 평화프라자 리모델링 지원, 청년인문학상점 조성 등이 추진된다.

이밖에 서구 농성동 일대를 그린 리모델링하는 '벚꽃향기 가득한 농성 공동체 마을' 조성에는 국비 100억원 등 319억원, 동구 동명동의 '문화가 빛이 되는 동명마을 만들기'에는 국비 100억원 등 200억원, 남구 사직동 일부의 역사 자원을 활용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더 천년 사직, 리뉴얼 선비골'에는 국비 100억원 등 300억원이 투입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도시재생 뉴딜 추진단'을 구성,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콘텐츠 및 연계사업 발굴에 힘써왔고, 자치구와 공동으로 도시공사, 테크노파크 등 공공기관과 협업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또 주민주도의 재생사업을 위해 광역 및 자치구 도시재생센터를 중심으로 주민협의체를 운영해왔다.

시는 향후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로 지적돼온 낮은 주민 체감도, 민간자본 주도의 대규모 철거사업으로 인한 둥지 내몰림, 중간지원조직 부재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실행, 환류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혁신모델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나주시 금남동, 광양시 광영동 중심시가지형 선정=나주시 금남동은 '현대화로 재조명한 역사·문화 복원 도시', 광양시 광영동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꿈꾸는 워라밸시티 광영'을 주제로 해 중심시가지형에 선정됐다.

여수시 문수동은 '스마트하게 통통통(通通通) 문수동', 광양시 태인동은 '태인동 과거·현재·미래를 열다! 시작(始作)' 등으로 주거지지원형 사업이 추진된다.

나주시 영산동은 '근대유산과 더불어 상생하는 영산포', 화순군 화순읍은 '달빛이 물들면 청춘낭만이 꿈트는 화순', 강진군 강진읍은 '강진읍 위대한 유산' 등을 주제로 일반근린형 사업을, 보성군 벌교읍은 '엄마품 주거지 장좌마을'을 주제로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을 각각 2023년까지 벌여 구도심 재생에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1일 광주역 일원의 '광주 역전(逆轉), 창의문화산업 스타트업 밸리' 조성사업을 경제기반형 뉴딜사업으로 선정했다. 광주시와 북구는 오는 2023년까지 국비 250억원을 토대로, 지방비, LH 등 공적 투자, 민간 투자를 더해 도심 기능 쇠퇴가 심각한 광주역 일대를 미래형 문화콘텐츠산업을 이끄는 원도심 문화경제권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남도는 800억원의 국비 외에도 LH 등 공기업이 1217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802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남도는 2021년까지 매년 7~8곳이 도시재생 뉴딜 정부 공모에 선정되도록 해 35곳 내외의 구도심을 재생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위한 소규모 재생사업과 도시재생 전문가 육성을 위한 도시재생대학도 오는 10월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2019년부터는 매년 도비 30억 원을 확보해 자체적으로 전남형 도시재생 사업도 나선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쟁점 수두룩…9월 정기국회 가시밭길

민생·개혁 법안에 슈퍼예산
이해 엇갈려 치열한 공방 예고

3일 개회하는 정기국회는 문재인정부의 집권 2년 차를 맞아 민생·개혁 입법 과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이 실패했다며 공세를 강화하는 야당이 맞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여야 각 당이 추진하는 민생·개혁 법안의 관철을 위한 '샅바 싸움'에 더해 470조 5000억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놓고 여야 간 기 싸움도 예고하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선거제도 개혁 등 각 당의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갈리는 현안도 많다.

여야는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2일 입법 전략을 최종 점검하며 전열을 재정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 입법 실현, 민생경제 회복, 한반도 평화 정착을 정기국회 목표로 내걸고 중점 법안 으로 52개를 선정했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기초연금법·고용보험법(소득주도성장), 규제혁신 5법·의료기기 및 드론 산업 등 지원법(혁신성장), 공정거래법·공정화법(공정경제) 등이 민주당 중점 법안 목록에 올랐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찰·경찰수사권 조정법 등 사회개혁법과 한반도 평화 관련 법안들도 민주당이 정기국회 통과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의 경제 관련 법안을 놓고는 자유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공수처 설치법도 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과 탄력 근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재건축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정하도록 격상시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를 개선해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와 비례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힘을 쏟기로 했다.

민주당이 재차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놓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선거제도 개혁은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이 강하게 요구하는 사안이나 개헌과의 연계 여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가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도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 등을 이끌 내년도 예산안의 원안 사수에 사활을 걸었고,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세금중독 예산안'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

한반도 '운명의 9월'…남북관계·비핵화 기로

특사파견·유엔총회…
문대통령 중재행보 주목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도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북한 정권수립 70주년(9·9절), 유엔총회 등이 몰려 있는 '운명의 9월'이 문 대통령 중재 행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운명을 판가름할 중요한 전기인 문 대통령의 '9월 중재외교'는 대북특사의 방북을 시작으로 숨 가쁘게 돌아갈 전망이다.

대북특사 파견의 일차적 목표는 좀처럼 매듭짓지 못하는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지만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북미 간 견해차를 좁히는 것 역시 그 못지않게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방북한 특사를 직접 맞았을 때처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이 성사되면 특사는 미국과 적극적인 태도로 비핵화 협상에 나서라는 뜻을 전달할 확률이 높다.

당장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현 상황에서 한 발짝도 진전되지 않는다면 남북 정상이 만난다 한들 사실상 '빈손 회담'이 될 수 있어서다.

핵·경제 병진노선을 뒤로 하고 경제 총력 노선을 선택한 북한이 9·9절에 앞서 대중에게 노선 변경의 당위성을 증명할 '성과'를 내놓아야 하는 만큼 특사는 김 위원장에게도 미국과의 견해차를 좁혀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특사단의 방북을 통해 남북의 생각이 맞아떨어진다면 취소됐던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남북정상회담 전에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한다.

실제로 특사단의 방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둬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해 북한과 미국 간 상당한 수준의 타협을 견인할 수 있다면 9월 한반도 정세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 간 의지에 따라 북한이 폐기할 수 있는 핵 프로그램 시설의 신고·검증을 약속하고 반대급부로 미국이 종전선언을 보장하는 형태의 일정한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9월 중순께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재차 확인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좀 더 구체화한 비핵화 로드맵과 종전선언 계획을 놓고 논의를 진전시킬 확률이 높다.

4·27 판문점선언 당시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정상 간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남북미 간 비핵화 논의가 어떻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전되는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연합뉴스